

◆ 政府 施策 ◆

제조업 海外投資 전면 自由化 — 정부, 規制 대폭완화 金融·稅制지원강화 —

정부는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수출입은행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투자가 기업경영의 세계화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해외 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외국환관리규정 개정(2월 13일 시행)을 통해 외환제도를 개선한데 이어 이달중 또 다시 이 규정을 개정해 해외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직접투자지침도 개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은 절차가 복잡한 한국은행 허가대상 사업을 축소하는 반면 절차가 간편한 외국은행 인증대상을 확대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으며 투자지침 개정을 통해서도 현재 14개로 돼 있는 해외투자 제한업종 가운데 제조업 분야가 전면 자유화된다.

정부는 이번 투자절차 간소화에 이어 해외투자와 관련된 행정규제를 금년중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투자기업들의 이윤극대화를 보장해 주기 위해 間接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間接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가 도입되면 해외에 설립한 기업(자회사)으로 부터 과실송금(배당소득)이 들어오는 경우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도입치 않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운용중인 해외투자자금을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금년 해외 투자자금지원계획 4천억원(외화대출, 5억달러규모에 해당) 중 25%인 1천억원이 중소기업 우선 지원분으로 책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輸銀의 해외투자자금 지원액중 전수기준으로는 80%, 금액기준으로는 23%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었다.

정부는 이밖에도 해외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반되는 위험요인을 커버해 주기 위해 해외투자보험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신용보증방식의 해외투자 보험을 새로 도입, 지원해 주기로 했다.

機械類 · 部品 · 素材 국산화 실효성 제고 대책 마련 - 通産部, 中小企業 支援 대폭 확대 -

통상산업부는 기계류 · 부품 · 소재의 적극적인 국산화로 수입대체를 촉진하고 對日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올해 시제품개발 지원자금 규모를 1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품목당 지원한도를 7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對日 수입대체효과가 연간 300만달러 이상인 품목에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화대출과 금리가 비슷한 국산기계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중 1조원 규모의 외화표시원화자금을 조성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내년부터는 외화대출과 외화표시원화자금을 단계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산개발 기계류 · 부품 · 소재에 국산화 우수품질인증(SQC)제도를 도입, 인증획득 품목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양산설비자금 및 판로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통산부는 지난 92년부터 기계류 · 부품 · 소재의 국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야의 對日의존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무역수지 적자의 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국산화 실효성 제고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 機械類 · 部品 · 素材 국산화 계획의 실효성 제고 對策

1. 기계류 · 부품 · 소재 국산화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및 추진방향

대내외 여건

- UR협상 타결에 따른 정부 지원제약으로 지원가능한 기간내 기계류 국산화 집중지원 필요성
 - UR / 보조금 규정상 향후 3년이 집중 지원이 가능한 마지막 기간
 - 공업발전기금중 시제품 개발자금은 UR / 보조금 규정상 경쟁전 개발자금으로 허용보조금에 해당되어 개발금액의 50%이내 지원가능
- 지금의 붐고 및 국내투자 회복에 따른 국산 기계류 개발공급의 호기
 - 38개 품목별 개발협의회를 통한 수입대체 가능품목 발굴, 고시 독려
 - 수입하는 품목중 국산화대상 기계류 · 부품 · 소재 일체 수요조사
 - 수요업체와 개발업체간 공동개발 및 연구기관의 기술지원 강화 유도
 - maker 중심보다는 user 중심의 개발과제 발굴

기계류 · 부품 · 소재 국산화 추진 방향

○ 국산화 단계

단 계	1 단계('95~2000년)	2 단계(2001~2005년)
중점방향	- 국산화 개발지원 · 에로기술개발 지원 · 단기개발 과제 중심 · 생산기반기술 향상 ↓	- 비교우위 기술확보 · 설계기술의 선진화 · 기초기술의 축적 · 시스템기술의 확보 ↓
	수입대체 위주 기계류 개발	수출용 위주 기계류 개발

○ 유형별 국산화 방향

- 고도기술의 대형플랜트 : 대기업 중심으로 수요업체와 협력하여 국산개발
- 중소형 단위기계 및 부품·소재 : 중소기업에 대해 공업발전기금중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
- 첨단기술산업제품 : 공업발전기금중 첨단기술개발자금 지원
- 공통애로 기반기술 : 공기반기술개발자금 지원
- 최첨단 기술 또는 경제규모 미달 품목 : 수입사용

2. 국산화사업 실효성 제고 대책

가.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확대 및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체제 개선

- 시제품 개발자금 지원계획 : ('94) 1,065억원 → ('95) 1,200억원
- 지원대상 품목 및 업체선정 기준 강화

〈품목 선정기준〉

- 대일 수입 대체 효과가 3백만불 이상품목 우선 선정
- 국산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첨단 핵심부품과 소재 및 소프트웨어 우선 선정

〈업체 선정기준〉

- 개발능력 중심에서 개발완료시 사업성 검토 강화
 - 현행 업체 선정기준 : 기술개발능력, 개발효과, 재무상태 등
- 연구소 또는 수요업체 공동개발업체 우선지원
- 자금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강화
- 자금운용 관리 및 개발실태 사후관리의 강화
 - 전산화 확대로 효과적인 자금운용관리체제 구축
 - 기계공업진흥회 → 자금 관리기관 전체로 확대
 - Data Base구축 : 기금 취급기관 및 생기원간 구축('96년까지)
 - 자금관리대장 점검 및 당초개발계획 이행상태 점검 강화
 - 업체에서 개발완료 보고서 현지 출장조사 확인
 - 자금유용업체, 개발기간 조작업체 등은 『기술개발 적색업체』로 분류하여 자금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지원제한

○ 자금지원 절차의 간소화 및 품목지원 한도 인상

- 자금 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직접 취급은행에 추천 : 통상산업부 경유 절차 생략
- 취급은행의 범위 확대 : 현행 3개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에서 평화은행 등 중소기업전담 은행으로 확대
- 품목당 지원한도 : ('94) 5억원 → ('95) 7억원

나. 국산 개발지원체제의 구축

○ 품질인증 체제의 구축

- 신개발 기계류에 대한 품질인증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 수립
 - 품목별 중장기 규격작성계획 및 인력, 장비 확보계획 마련
 - 기존의 품목별 품질인증 담당기구간 업무연계 방안 구축
 - 자체 품질인증체제를 구비한 조립 대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및 시험기관간 업무연계 방안 수립
- 공업기술원을 품질인증 총괄기관으로 육성
 - 국산개발 기계류, 부품, 소재 품질인증을 위한 국산화 “우수품질인증(SQC : Superior Quality Certificate)” 제도를 신설 검토
 - 미국 UL마크의 경우와 같이 민간 품질인증체제가 정착되는 정도를 보아 민간기관으로 단계적 이양
- SQC획득 품목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양산설비자금 및 판로확대등 지원

○ 하자보증제도의 확대

- 하자보증 대상품목 확대 : 기계류 →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
 - 업종별 단체내에 공제조합 설립 유도
- 하자보증기금의 확대
 - 기계공제조합의 기금 : ('94) 70억원 → ('96) 100억원
 - 하자보증규모 : ('94) 4,390억원 → ('96) 6,500억원

- 기계류 성능에 대한 손해보험제도 도입 확대
 - 현재는 고압가스용기 및 기기류에 한정
(고압가스, 액화가스 및 도시가스 관련법)
 -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등 하자보증을 겸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 강구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강화

- 출연연구소 보유기술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 양허 확대
 - '93~'94. 11동안 255개 중소기업체에 기술 무상제공
 - 기설치된 『연구개발 실용화사업 추진본부』 기능강화
- 보유중인 시험검사장비 개방확대 및 실비사용
- 출연연구소와 공동개발계획을 수립한 품목을 우선 지원

다. ㅁ고를 활용한 한·일 산업 협력사업의 강화

○일본 첨단기술 제품의 대한투자 적극유치로 기술이전 촉진

- 광주 평동 및 천안에 외국인투자 전용공단의 조기 조성
 - 평동은 '95년, 천안은 '96년까지 각각 20만평, 15만평 규모 조성
- 대일 투자유치단 및 조사단의 교환 파견 확대

○한·일 공동으로 핵심부품생산 중소기업육성 시범사업 실시

- 협력분야: 국내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한·일 협력가능성이 높은 주요 핵심부품 분야
ㅁ에 의한 해외현지생산 추진 부품 우선대상

- 1차 협력대상: 주물, 실린더, 센서, 자기헤드 분야 1개 업체씩 일본에 추천
 - 실시결과를 보아 대상분야 확대

○선진국에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품목은 해외 현지에서 개발

- 선진국 현지에 연구소 설립, 우수인력 채용 활용
- 개발된 첨단기술은 국내에서 생산
 - 수출위주 품목에 대하여는 현지공장 인수도 추진

라. 주요업체와 생산업체간 국산개발 협력체제의 강화

○ 주요 대형설비 투자사업에 대한 설비 국산화 상호협력 강화

- 대상사업 : 자동차 제조설비등 수입규모가 크고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설비
- 대형 투자사업 계획단계인 설비발주 및 설계서 작성과정에서 국내 기계업체 참여 및 정보 교환 확대
- 조사대상 설비의 확대 : ('94) 자동차 제조설비등 3개품목 → ('95) 제철설비, 발전설비등 3개 품목

○ 환경규제에 대응한 환경설비 투자계획을 조사하여 국산개발 계획과 연계

- 조사기관 : 전경련 소속 한국경제연구원
- 대상업종 : 철강, 비철금속, 염색, 피혁등 12개 업종
- 조사기간 : '94~'96년(매년 4개 업종대상 조사)
- 연계방안 : 환경설비 생산업체에 기술정보 자료제공 및 정보교환 강화 유도

○ 부품의 표준화로 호환성제고 및 업체간 상호구매 추진

- 대상업종 : 자동차부품, 건설기계부품에 대해 '95년부터 추진, 타업종으로 확산

〈표준화 및 상호구매가능 품목〉

- 완제품의 성능결정에 직접영향이 적은 부품
- 경제규모 미달로 공용화가 필요한 부품
- 기술개발 투자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부품

- '95년 계획(예) : 자동차 : 엔진부품 등 30개

계 47개 부품

건설기계 : Swing, Motor 등 17개

- 업종별 단체 중심으로 민간자율적 협력여건 조성 및 상호구매 확대

마. 기계공업진흥회내 국산화사업 기획 평가협의회 설치 운영

○ 설치 및 구성 : 기계공업진흥회내 설치

전자공업진흥회 등 5개 기금담당기관 임원 및 은행, 연구소 등 지원기관의 전문가

○ 임 무 : 국산개발 사업의 관리 및 평가

국산화사업 심사분석 및 애로요인 발굴

기금담당기관간 업무의 일관성 확보 및 정보교환 확대

국산화사업 방향제시 등

發電사업 民間企業 본격 참여

— 通産部, 年內 유연탄 · LNG발전소 대상사업자 선정 —

국내 발전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통상산업부는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에 민간기업이 건설·소유·운영하는 발전소사업 참여를 본격 허용키로 하고 우선 연내에 유연탄발전소(50만 KW급) 2기와 LNG복합화력발전소 2기에 대해 민간 대상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민자대상발전소 1단계사업으로 LNG복합화력 2001·2002년 준공분 40만 KW급 각 1기를 각각의 단위사업으로, 석탄화력(유연탄) 2003·2004년 준공분 50만KW급 2기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발전소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방식은 민간기업이 발전소를 건설·소유·운영하되 생산 전력은 전량 한전에 판매토록하고 전력구입요금은 한전 발전소의 발전원가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참여자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최종 선정되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오는 96년부터 투자를 허용하되 투자비율 50%미만 범위내에서 국내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현재 국내 전력사업은 전기사업법상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으나 韓電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발전사업에 본격적인 민간기업, 참여로 방대한 규모의 전원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의 재원 조달부담을 줄이고 본격적인 경쟁체제 도입으로 전력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민간기업의 발전설비 분야 국제 경쟁력 강화로 해외 수출이 본격 촉진될 것으로 통산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통산부는 올 상반기중에 지난해 수행한 민자발전기준 및 절차수립을 위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민자발전의 인허가 기준등 구체적인 민자발전업무 처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 공고 후 참여업체를 연내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감안해 금년도 장기전력수급 계획 조성시에 민자 대상 발전소를 추가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이용 合理化資金 1800억 지원

— 通産部, 지원대상 擴大 · 融資절차 대폭 간소화 —

통산부는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으로 총 1800억원을 조성,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투자 등에 저리로 융자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95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계획에서 집단에너지분야에 905억원, 산업체 등의 에너지절약 투자에 895억원등 총 1800억원의 합리화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이자율 5~7%에 3년거치 5년간 분할상환의 유리한 조건으로 이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특히 금년부터는 여름철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절약형 전기이용기와 설비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아래 고효율전동기와 소형 대체냉방기기, 스팀터빈 등 절전기자재를 지원대상품목에 새로이 추가하고 전기냉방기기를 가스냉방, 빙축열, 지역난방 등 대체냉방기기로 개채하는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금년부터는 산업체의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투자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 절약효과가 큰 복합절약 투자를 촉진하고 소액 에너지절약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융자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액은 총 1861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51%가 증가, 국내업체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電氣 電子産業 技術인프라 構築

— 通産部, 전기전자산업기술인프라 확충사업계획 발표 —

정부는 국내 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총 1737억원을 투입, 전자산업 기술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연구단지 건설, 중소기업의 전문정보기술인력 양성, 산업정보전산망 구축, 산업기술정보의 지방 확산 및 연구개발 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전자·전기산업 기술인프라 확충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통신부가 발표한 세부시행사업계획에 따르면 우선 공동연구단지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568억 원 을 들여 내년말까지 용인소프트웨어 공동연구단지 건설을 완료하고 사업비 180억 원 규모로 시스템조 명 산업협동화단지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향후 4년간 비메모리분야의 설계인력 양성사업에 200억 원을 투입 하는 한편 첨단전자영상 소프트웨어 설계인력과 전자산업 정보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각각 13억 원, 6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통신부는 또 통상산업행정의 전자화 조기 실현을 위해 관련기관등 총 332개 단체가 참여하는 산업 정보전산망을 구축키로 하고 향후 3년동안 총 590억 원을 투입, 오는 97년 5월까지 전산망구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연내 산업정보전산망사업을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관 전산망 체계에 편입시켜 행정·금융등의 타전산망과 연계 운영되도록 하는 기반조성단계를 거쳐 내년도엔 시범망 구성 및 가 동을 통한 시범운영단계에 이어 오는 97년까지 정보공개 및 보호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완비해 나가 기로 했다.

통신부는 또 중앙과 지방간의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산업기술정보원과 공업기술원 협력으로 각각 지역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광주·대구·전북등 3개지역을 지역정보 화, 시범대상지역으로 선정, 중점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 중소 중전기기제조업체가 편리하게 시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韓電의 예산으로 전북 고창에 22.9KV급 실증실험장을 건설하고 경기도 의왕시에 500MVA급 단락시험설비를 갖추는 등 전 기산업의 지방 시험설비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선진국 環境波高 개도국 적용

— 輸入品에 ‘環境稅’ 부과 추진... 환경과 무역연계 —

올해는 환경을 무역과 연계시켜 높은 수준의 환경기준을 개도국에도 적용시키려는 선진국들의 공세 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그린 301조나 환경상계관세부과와 같은 일방조치방식을 들고 나와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던 선진국들이 올해는 표면적으로 GATT 규범에 일치하면서도 강력한 환경제재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국경세조정·환경마크부착 등 이른바 경제적수단으로 무장, 개 도국의 입지를 공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WTO·OECD의 무역환경 논의동향이란 보고서에서 선진국이 주축이 돼 제기한 무역·환경에 대한 논의가 환경을 이유로 무역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선진국내에서도 공통된 의견을 갖지 못해 작년에는 상호 의견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

통산부는 그러나 올해는 OECD를 중심으로 선진국의 입장이 점차 정리되고 있는데다 오는 5월중에는 무역·환경에 관한 보고서가 OECD 각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어 지금까지 진행된 초안만으로도 선진국은 WTO에서 보다 강력한 공동대응전략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선진국들은 OECD를 통한 무역·환경 논의에서 그린 301조나 환경상계관세와 같은 강제적인 조치는 지양하되 수입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는 GATT 규정을 원용, 국경통과시 수입품에 환경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경세조정(BTA)을 통해 강제적조치에 버금가는 환경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무역상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개도국들이 반대하고 있는 환경마크제도도 바이어의 환경마크 요구가 WTO규정상 정당한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고 외국기업도 이 마크를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동 제도의 채택을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통산부는 이같은 선진국의 무역·환경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OECD논의를 계속 주시하는 한편 무역·환경연구회를 구성, 선진국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우리 업계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中企 品質經營진단·지도

— 工振廳, 대상 擴大...200개社 ISO인증획득 책임지도 —

공진청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 700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품질경영의 진단및 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공진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품질 경영 진단·지도 대상업체로 세계일류화기업, 공장품질경영 등 급업체등 ISO9000 인증획득이 시급한 유망 중소기업과 소프트웨어·유통·호텔·건설등 비제조업체 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원대상 업체중 200개업체에 대하여는 ISO 9000인증 획득시까지 정부비용으로 책임지도하는 한편 나머지 500개업체에 대하여는 품질 경영상의 문제점 개선요령 및 인증획득 가이드라인등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종업원 50인 이하인 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담, 진단·지도비용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공진청은 올해부터 진단·지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업원이 50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되 이중 완제품업체는 표준협회등 단체 진단기관이, 부품업체는 모기업이 담당토록 했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등 인력과 자금력이 우수한 진단기관에 대하여는 진단·지도업체의 선정및 추진방법면에서 독자성을 부여하며 정부차원에서는 진단기관·연수기관의 육성, 진단사의 양성·배출등 인프라분야의 확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진단·지도의 비용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올해 8월까지 5개월동안 1차지도를 실시한 후 중간평가를 실시, 품질경영상태가 우수한 업체는 ISO 9000 인증획득을 유도하고 잉여인력및 자금은 계속지도가 필요한 업체에 추가 투입하여 진단·지도사업의 추진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진청은 올해 진단·지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공모를 통해 2월말까지 22개 진단기관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공진청이 지난해 품질경영 진단을 실시한 중소기업은 총 641개업체로 이중 239개사를 선정, 집중 지도를 실시한 결과 지도업체의 불량률이 지도전 2.18% 에서 지도후 1.49%로 향상됐으며 지도비용도 민간 컨설팅 기관을 활용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6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輸出品 자율검사 표준基準 제정

— 工振廳, 중소기업 輸出品 품질향상 도모 —

공진청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제품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해 자율검사 표준기준을 마련했다.

공진청에 따르면 과거 수출검사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하던 수출검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들이 품질기준을 몰라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하고 291개 주요 수출품에 대해 자율검사를 위한 표준기준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품목은 수출물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반등 기계분야 41개품목, 전기다리미등 전기전자분야 54개품목, 도자기질 타일 등 화학분야 58개품목, 알루미늄기물류등 금속분야 41개품목, 가방을 비롯한 생활용품분야 45개품목이다.

표준검사 기준을 보면 칩낭의 경우 유해원소 함유율에 중점을 두어 PCP(Penta Chloro Phenol) 함유량 5ppm이하, 프롬알데히드 75ppm 이하로 정했다.

신사복등의 부속재료인 의 류심지용 부직포는 수축률 2%이내, 열수축률 1%이내, 프롬알데히드 함유량 500ppm으로 정했으며 천막지나 덮개에 사용하는 타포린은 인장 · 파열강도등에 중점을 두었다.

공업용합성세제는 중금속인 비소및 납이 기준치보다 높을 경우 수질오염을 유발, 선진국의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비소인 경우는 1ppm이하, 납은 10ppm이하로 기준을 정했다.

모니터는 주위의 전기전자기계등에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범위에 따라 40dB이하기 되어야하며 등산용버너는 소화시간 30초이내, 열효율 45%이상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진청은 국내 수출업체의 대부분이 바이어 주문에 의한 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품질향상에 관한 인식없이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제품품질 향상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며 이같은 폐단을 막기위해 지난 93년부터 지난해말까지 국제규격 · 단체규격 · 국내의 각종규격및 업체실태조사등을 통해 표준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국수출구매자협회에서 바이오피스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상품의 종합적인 국제경쟁력은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뒤떨어진다고 보는 시각이 67.1%로 나타나 품질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 바 있다.

▲ 표준검사기준 제정품목현황 <전기 · 전자 분야>

• 변압기 • 아답터 • 전지 • 축전기 • TV카메라 • 라디오수신용기기 • 텔레비전수상기 • 위성수신용안테나 • 경보기 • 축전지 • 전기저항기 • 백열램프 • 이퀄라이저 • 전기냉장고 및 냉동고류 • 전기제빙기 • 전기냉수기 • 복사기 • 철강제의 관련결구류 • 레코드플레이어 및 전기축음기 • 전화응답기 • 녹음기 및 음성기록기 •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 오디오녹음용 테이프 • 비디오녹음용 테이프 • 마그네틱디스크 • 워키토키 세트 • 확성기 • 헤드폰 • TV수상기용안테나 • 형광방전관 • 가청주파증폭기 • 팬 • 세탁기 • 프린터 • 모니터 • 무정전전원장치 • 배터리충전기 • 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 코드레스폰 • 누전차단기 • 할로젠전구 • 면도기(전기) • 기타전동공구 • 진공소제기 • 배선용차단기 • 헤어드라이어 • 전기다리미 • 전자레인지 • 전기밥솥 및 보온밥통 • 마이크로폰 • 휴대용전등 • 건전지 • 고압애자

ISO-9000 KS 규격 개정

— 工振廳, 15개 항목개정...전화주문으로도 제품 出荷가능 —

공진청은 국제품질경영체제 보증규격인 ISO 9000 규격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국내 대응규격인 KSA 9000(품질경영및 품질보증)관련 규격을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KS규격에는 ISO 9000 인증에 직접 적용되는 규격으로 경영자책임, 계약관리, 공정관리등 20개 항목중 품질시스템, 설계관리, 문서관리등 15개 항목이 포함됐다.

이번 규격개정으로 ISO 9000 인증업체는 품질방침설정, 승인등의 업무를 담당부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 공식계약 체결없이도 전화주문, 주문서등으로 제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PC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문서관리도 인쇄형태 위주에서 PC등에 저장된 형태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실적이 우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무검사를, 불량한 업체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검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입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진청은 여타 ISO 9000 관련규격인 KSA 8402(품질용어), 9000(품질경영 및 품질보증규격), 9004(품질경영및 품질시스템의 요서)도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상반기준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이 定額還給率表 개정고시

— 관세청, 1140품목 中企수출지원도모 —

기계류, 전기기기등 1140개 품목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율이 이달부터 바뀐다.

관세청은 최근 중소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개정고시하고 2월 1일 수출면허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고시된 간이정액환급대상물품은 ▲방직용 섬유및 관련제품 240개 ▲화학·수지및 고무제품 175개 ▲기계류및 전기기기 183개 ▲가죽·목재·제지제품 105개 ▲금속제품 96개 ▲신발·유리제품 69개 ▲잡제품 53개등 모두 1140개품목으로 지난해보다 201개 품목이 줄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란 인력및 경험부족으로 소요량증명·수입면장등의 서류를 첨부, 관세환급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책정된 금액(10달러당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연간 환급액이 1억원이하인 중소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간이정액환급액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세액보다 20%이상 적을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지 않고 개별환급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간이정액환급대상 1341개 품목 5096개 업체에 대한 환급실적은 전체 환급액의 5.3%인 533억원(1만 3946건)으로 전년대비 건수와 금액면에서 각각 43.7%와 101.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품질인증 中企 단체 隨契 우선 배정 - 조달청, 계약이행 능력 事前조사 -

조달청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단체수의계약물품을 구매할 때 업체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에는 물량을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조달청은 특히 「KS」나 「품」마크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체결시 해당 협동조합과 물량배정업체가 공동으로 품질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와함께 단체 수의계약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 중소기업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이 공제기금을 조성, 하자보수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모두 1조6천1백17억원 상당의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는등 중소 업체들에 일종의 구매우선권을 부여해 오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이 이를 악용, 품질개선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